

민주연구원, 『슬기로운 지방선거』 3호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발간

- 지방주도성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 민주당은 계속 추진할 것

3월 27일(금),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대비를 위해 기획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브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1, 2호 브리핑에 이어 이번 제3호는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행정통합이 난맥상에 빠진 원인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다. 보고서는 산업화 시대 성장전략으로 인해 10년뒤에는 전체 인구의 52%, 지역생산(GRDP)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과 광역화, 5극3특 발전 전략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둘째, ‘행정통합의 효과’이다. 보고서는 행정통합이 지역에 재정, 일자리, 인재 세 가지(3)를 불어넣어 단순한 1+1이 아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파격적인 정부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통합지역 입주기업 지원,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을 행정통합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이다. 보고서는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결이며, 이를 이재명대통령이 이어받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의지에 화답해 민주당이 지역별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몽니에 결과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이 출범을 앞두고 있고, 대전충남, 대구경북특별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일목요연한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보고서는 행정통합의 시발점인 대전시의회·충남도의회 의결 역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점을 짚으며 당시에는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자 주민투표를 요구한 점이 자가당착적 논리임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와의 협상,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음에도 ‘100% 완벽한 법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전형적인 발목잡기임을 꼬집고 있다.

다섯째, ‘행정통합의 향후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전남광주특별시만이 출범하게 되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지역별 통합특별위원회, 단체장의 공론화 추진 등으로 진정한 지역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5극3특 발전 전략, 지방주도성장을 통해서도 이러한 진심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호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와 2호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그리고 이번 3호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에 이어, 부동산 대책의 추진 경과와 전망을 다루는 제4호 브리핑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를 향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정책프리핑 특별호 『슬기로운 지방선거』 브리핑 전체 발간 일정

- | | |
|------------------------------|---------------------------|
| ① 2026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 (3.23.월) | ②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3.25.수) |
|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3.27.금) |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3.30. 월) |
| ⑤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 (4.1.수) | ⑥ 지방선거, 여기부터 시작하자 (4.3.금) |